

민주 입실군수 본경선 진출자 확정

김병이·김진명·성준후·한득수 예비후보 등 4명... 10~11일 이틀간 본경선 치러져 군산 예비경선 관련 "실무 착오로 일정 중단, 권당·후보자에 사과... 재경선 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실군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인 박영자 위원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입실군수 본경선 진출자로는 김병이·김진명·성준후·한득수 후보 4명이 확정됐다.

후보 발표는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는 당규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100% 권리당원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권리당원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 입당 후 올해 2월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본경선과 결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본경선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도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본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군산시의 입실군은 예비경선 및 후속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군산시의 경우 예비경선 과정에서 실무 착오로 일정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권리당원과 후보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현재는 후보자 협의를 거쳐 2~3일 재경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예비경선 중단 사유와 관련

해서는 후보자 경력 표기 과정에서 전직을 '현직'으로 잘못 기재한 실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당 선관위는 이를 발견 즉시 경선을 중단하고 권리당원들에게 안내한 뒤 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가감점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결과에는 관련 규정이 반영됐다"고만 언급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경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정치로 나아가겠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에게 도전하는 김성수 세무사가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준비했던 자임추모공원 사태 관련 입장 대신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관영 도지사 제명, 구조의 문제”

김성수 도지사 후보 “전북 정치 생태계 바뀌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전하고 있는 김성수 세무사가 김관영 지사의 민주당 제명 사태를 두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북 정치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성수 세무사는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준비했던 자임추모공원 사태 관련 입장 대신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세무사는 자임추모공원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사안으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만큼 정책과 관련해 "새만금관리청에 업무 면담을 요청했으며, 다음 주 중 방문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당 중심 구조를 수의 자산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한 구조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세무사는 이날 발표한 김관영 지사의 민주당 제명 조치와 관련해 개인적·정치적 입장을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 소회로 "정책 논쟁이 가능한 유일한 상대였던 김 지사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며 "전주·원주 통합, 울림파크 유치 등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많았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되는 구조가 고착화 돼 정책 경쟁보다 조직 경쟁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정책이 우수한 인물이 선택되기 어렵다"며 "도민들에게 허탈감과 자존심의 상실을 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세무사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산업·재정·정치 전반의 생태계 구조를 설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 개혁이말로 전북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 공천 과정,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 민주기초단체장 참여 일부 예비후보들, 당 차원 개선 촉구

1인 1안심번호 원칙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 참여 중인 일부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 방식의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했다.

김양원·성준후·임종철·한수용 예비후보 등은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 과정은 이미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당 차원의 즉각적인 감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양원·성준후·임종철·한수용 예비후보 등은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 과정은 이미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당 차원의 즉각적인 감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개 시·군에서 동시에 의혹이 제기될 정도라면 이는 특정 후보의 불만이나 지역적 잡음이 아니라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중대한 신뢰 위기"라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들은 현행 경선 방식의 핵심 문제로 안심번호 기반 여론조사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일부 조직이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을 활용해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운동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사람은 휴대전화 1대만 사용하는 반면, 특정 세력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 수천 건의 휴대전화 번호가 증가하고, 응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중앙당에 △전북 지역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윤리감찰 실시 △안심번호 추출 및 여론조사 방식 전반에 대한 외부 검증 △의혹 해소 전까지 경선 절차 중단 또는 전면 재설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후보들은 대안으로 1인 1안심번호 원칙 도입과 일정 기간 이전에 생성된 번호만 활용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만 이뤄진다면 공정한 경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천은 민주주의의 입구인데, 그 입구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전북 정치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은 개인의 당락을 떠나 호남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공정성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조만간 민주당 중앙당을 방문해 추가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오현숙)은 2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명 조치와 관련해 "사태의 본질적 책임을 덮을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현직 광역

단체장이 '형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것은 초유의 사태로 사건의 중대성과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도 "제명이라는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

가 면죄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당원 참석자 전원에게 대안조사서 △공품 제공 및 수수 여부, 경위, 대가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정책 중심 클린선거로 승부”

혁신당 도당, 전주 출마예정자 정경 발표회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 지역 출마예정자들의 정책 역량과 비전을 공유하는 정경 발표회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 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당 사무실에서 전주시 출마예정자 정경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당원들이 후보들의 정책 방향과 지역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발표회는 이효진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광역의원 1명과 기

초의원 9명 등 총 10명의 출마 예정자가 참여했다.

후보들은 각각 4분씩 주어진 시간 동안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전주의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정책 경쟁을 펼쳤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공명선거 실현 서약식'이 진행됐다.

참석 후보자들은 △비밀과 흑색선전을 배제한 정책 중심 선거 △당 결정 및 관련 법규 준수 △경선 결과 승복과 원팀 정신 유지 △시민 신뢰 기반의 품격 있는 정치 실현 등을 다짐했다.

▶ 6·3 지선 예비후보자 공약

“택시기사 쉽터·교통회관 건립” “문화예술 기반 근본적으로 강화” “빈집에서 시작하는 도시재생” “태양광 기반 전력 인프라 확대”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택시 운전원의 복지 향상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 교통 공약을 제시했다.

우 후보는 2일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택시 운전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우선 완산권과 덕진권에 각각 1개소씩 택시기사 전용 쉽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쉽터는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폭염과 한파 속에서 근무하는 운전원들이 휴식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지와 시설을 결정하고, 향후 이용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 과제로 '전주시 교통회관' 건립도 추진한다. 교통회관은 택시 운전원 교육과 훈련, 조합 및 협동조합 사무공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돼 교통 종사자 복지와 교통행정 지원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의 문화예술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종합 공약을 내놓으며 문화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의 비탕과 문화예술인의 기본을 책임지는 전주를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가 제시한 4대 방향은 △예술인 중심 △빛바람 침 행정 △거점과 공간 지원 △활동 플랫폼 강화다.

먼저 예술인 중심 정책으로는 형식과 의전을 최소화한 축제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예술인 활동 수당을 확대하고, 중장년 예술인 자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 참여를 보장하는 쿼터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지원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조 예비후보는 문화예술 정책과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이 실현되는 공간과 거점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의 문화예술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종합 공약을 내놓으며 문화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의 비탕과 문화예술인의 기본을 책임지는 전주를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가 제시한 4대 방향은 △예술인 중심 △빛바람 침 행정 △거점과 공간 지원 △활동 플랫폼 강화다.

먼저 예술인 중심 정책으로는 형식과 의전을 최소화한 축제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예술인 활동 수당을 확대하고, 중장년 예술인 자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 참여를 보장하는 쿼터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지원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조 예비후보는 문화예술 정책과 복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이 실현되는 공간과 거점 확대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주 원도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구상을 내놓았다. 개발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 접근으로 빈집과 골목을 재생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우선 방치된 빈집과 노후 건축물을 지역 재생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빈집의 창업·돌봄·문화 공간 전환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유자·활용자 매칭 플랫폼 운영 △농담동·노송동·중앙동 일대 청년 창작 거점 조성 및 임대료 지원 △'동네 문화살롱' 100개소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도심 인구 유입을 위한 정착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 예비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 및 정착 장려금 지원 △원도심 초등학교를 지역 돌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도보 15분 생활권 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등을 약속했다.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2일 남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산단 내 변전소 구축'과 '태양광 기반 전력 인프라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남원은 낮에는 전력 이 남고 밤에는 부족한 구조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전력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기업은 남원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전력 기반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의 핵심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변전소를 구축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김 후보는 "산단 내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